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			 대한민국 대원환 한국판뉴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ue; padding: 2px;"> 보도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ue; padding: 2px;"> 2021.8.13.(금) 조간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ue; padding: 2px;"> 배포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ue; padding: 2px;"> '21.8.12.(목) </div>

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책 임 자</div>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박 재 훈(02-2100-2960)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담 당 자</div>	김 지 웅 사무관 (02-2100-2682)
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(02-2100-2650)		홍 상 준 사무관 (02-2100-2661)

제 목 :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

■ 경쟁도 평가결과

-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은 오랜기간 동안 3개사가 시장을 균분해 오고 있어 **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**되었습니다.
- 그러나 신용평가업의 특성과 신용평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**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에 집중**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.
- *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추진시 경쟁촉진에 따른 신용평가 품질개선 효과보다 등급 쇼핑 및 등급 인플레이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

■ 정책 추진방향

-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와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**제도개선을 지속 추진**하겠습니다.
- 추후 시장진입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**중장기적으로 인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**하겠습니다.

1 개 요

-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(제2기) 논의*를 통하여 「신용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」을 확정하였습니다.

* 위원회 회의 개최(6.24일) 및 수차례 의견수렴 절차 진행 등

※ 경쟁도 평가는 국정과제인 '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'과 '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'의 일환으로 추진중('21.2월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확정)

< 참고 >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

구 분	한기정(위원장)	전상경	이수진	조혜진	이효경	이기영
현 직	서울대 교수	한양대 교수	금융연구원	인천대 교수	충남대 교수	KDI 연구위원
구 분	하정림	조성진	윤민섭	최현경	여은정	오광욱
현 직	태림 변호사	서울대 교수	한국금융소비자 보호재단 연구원	산업연구원	중앙대 교수	고려대 교수

(1) 신용평가업 현황

☞ (신용평가업)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사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및 발행사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업

□ (산업현황)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은 전체인가를 받은 3개社와 부분인가를 받은 1개社가 영업중이며,

- 주요 3개社*가 연간매출 1,4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약 1/3씩 균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
* 한국기업평가, 한국신용평가, 나이스신용평가

** 부분인가를 받은 서울신용평가는 매출액 기준 약 2.5% 점유(회사채를 제외한 기업어음, 전자단기사채,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만 평가 가능)

□ (재무현황, 주요3社) 회사채 발행 시장규모 확대 등에 따라 신용평가사의 매출 및 수익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

- 평가수수료 수입 확대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*,

- ROA, ROE 모두 안정적인 모습**을 보이며 국내 상장사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.

* ('10년) 한기평 118.7, 한신평 81.9, 나신평 64.6 → ('20년) 한기평 174.4, 한신평 142.5, 나신평 103.1(단위: 억원)

** (과거 10년 평균, %) ROA: 한기평 12.3, 한신평 30.1, 나신평 20.9(상장사: 3.39)
ROE: 한기평 15.7, 한신평 40.9, 나신평 34.3(상장사: 6.00)

-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안정적·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배당성향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

* (한기평) '10년 이후 대체로 65%대, (한신평·나신평) 꾸준히 90%대 유지

□ (시장현황) 신용평가사의 수익기반인 회사채 발행규모*가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.

* ('00년) 82 → ('05년) 130 → ('10년) 241 → ('20년) 387(단위: 조원)

- '13년 이후 유동화 상품 중 ABCP와 AB 전단체 시장도 대폭 확대되었으며* 사모사채 발행**도 점차 증가 추세입니다.

* 연간발행액: ('13년) 59조원 → ('20년) 285조원

** 연간발행액: ('04년~'12년) 3조원대 → ('18년~'20년) 7~9조원

- 다만,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발행기업 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.

* (등급보유 발행사 수) 889개社('14년)→ 889개社('20년초)로 수년간 정체

[2] 신용평가업 경쟁도 평가

① 시장집중도 분석: 시장집중도 지수평가로는 고집중 시장입니다.

-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을 균분함에 따라 시장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수*는 고집중시장에 해당합니다.

* HHI는 약 3,200, CR3는 약 97.5%('20년 기준)

- 미국, EU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더 높거나^{높으면} 집중도↑ 유사한 집중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.

* (美) HHI 3,712, CR3 95.1, (EU) HHI 3,049, CR3 91.1 (각 '20년 기준)

<주요 시장집중도 지수>

※ (Herfindal-Hershman Index, HHI) 美 법무부, 韓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심사시 활용하는 지수로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수치

- [美 법무부] $HHI < 1500$: 집중되지 않은 시장, $1500 \leq HHI \leq 2500$: 다소 집중된 시장, $2500 < HHI$: 高 집중시장

- [韓 공정위] $HHI < 1200$, $1200 \leq HHI < 2500$, $2500 \leq HHI$ 로 단계 구분

※ (Concentration Ratio3, CR3)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을 합한 수치로 공정거래법은 75% 이상인 경우 3개사를 독과점적 지위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

② 시장경쟁의 실증분석: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경쟁제고 및 품질개선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

- (경쟁제고) 최근 신용평가사간 경쟁이 일부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

- 최근 발행사의 평가사 교체가 증가하고 수수료도 하락하였으며,

* (평가사를 교체한 발행사수) 24~33개('11~'14년) → 44개('15~'20년 연평균)
(건당 수수료 변화, '10년→'20년) A사: 711→400, B사: 446→324, C사: 652→294(만원)

- 평가사가 동일 대상에 부여한 평가등급이 상이한 비율*(스플릿)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.

* ('10년~'14년) 3.1~4.3% → ('14년~'21년.上) 6.0~8.8%(다만 S&P, Moody's 간에는 20% 상회)

- **(품질개선)** 신용평가의 정확성과 안정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.
 -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의 **연간부도율***이 꾸준히 하락하였습니다.
 - * (부도업체수 /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): ('09년) 3.8% → ('13년) 2.8% → ('20년) 0.44%
 - 최근 5년('16~'20)간 **등급유지율***은 평균 86.3%로 향상되었고, 연중 3단계(notch) 이상 급격한 등급조정 사례도 未발생하였습니다.
 - * 연초 부여한 신용등급이 연말에도 유지되는 비율 ('09년) 72% → ('13년) 78% → ('20년) 91%
 - **(시장평가 개선)** 기관투자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만족도도 제고*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('21.5월, 금감원, 금투협).
 - * 정확성 만족도(5점): 3.15('17년) → 3.49('18년) → 3.67('19년) → 3.74('20년) → 3.79('21년)
 - 등급평정의 투명성 개선여부: 긍정적(66.2%, 96명), 보통(29.7%, 43명), 부정적(4.1%, 6명)
- ※ 단, 위의 효과는 제도개선 외에도 거시경제 상황, 산업 동향, 회사채시장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

③ 신용평가업 특성: 인가정책 등 검토에 있어 신용평가업의 특수성과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**(장기간 신뢰축적 필요)** 신용평가업은 새로운 서비스나 낮은 수수료보다 높은 품질의 신용평가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,
 - 이를 위해 오랜 평가경험 축적을 통해 장기간 평가능력을 검증받는 것이 필요한 특성을 갖습니다.
 - * (투자자 입장) 투자결정 근거로 활용하므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평가정보가 중요
 - (발행사 입장)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비공개 자료를 평가사에 제공해야 하므로 높은 신뢰관계가 필요
 - (평가기술 측면) 신용평가가 시장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표본으로 상당기간의 평가경험 축적 필요
- ⇒ 이러한 특성으로 미국, EU 등 주요국도 오랜기간 평가업을 영위한 소수의 주력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*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
- * S&P, Moody's, Fitch 등 3개사가 과점

- **(공공적 성격)** 평가결과가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금융계약·감독 등에 폭넓게 활용*되어 공공적 성격이 강합니다.

* (예) 금융계약에서 평가등급이 광범위하게 활용(담보인정비율 등)

- 이에,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진입을 허용해야 하고, 이해 상충방지, 내부통제 강화 등 적절한 영업행위 규제도 필요합니다.

⇒ 미국, EU 등 주요국도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진입제도, 영업행위 규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

- **(시장구조적 특성)** ① 발행사 우위 구조가 지속되고, ② 시장규율 저변도 미약한 편입니다.

- 발행사 수가 한정되고 발행사 지불 구조(issuer-pay)가 지속되어* 발행사의 협상력이 신용평가사보다 우위에 있으며,

* 평가대상인 회사채 등 발행사가 평가비용을 지불하므로 양호하게 평가할 유인 존재

- 특히 우리나라는 시장규모 및 기관투자자 역량 등 고려할 때, 해외 주요국에 비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* 저변도 미약한 편입니다.

* 예를들어, 기관투자자 등 시장기능을 통해 평가품질 저하를 용이하게 판단하고, 품질이 낮은 평가를 한 해당 신용평가사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

⇒ 발행사 우위 구조하에서 시장규율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진입촉진만으로 신용평가 품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

⇒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새로운 업자가 단기간 내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,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추진시 긍정적 효과보다 등급 인플레이 등 부정적 영향 우려*가 높습니다.

* (사례) 과거 신용평가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초래된 등급 인플레이션이 '08년 美 금융위기(서브프라임 사태) 발생의 단초 제공(10년 美 의회 무디스 관계자 청문회 증언)

[3] 종합 평가 및 제언

□ **[종합 평가]** 우리나라 신용평가지장은 오랜기간 동안 3개사가 시장을 균분해오고 있어 **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**되었습니다.

- 그러나 신용평가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**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에 더욱 집중**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.
- 신용평가업은 장기간 신뢰와 평판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특성을 가지는 가운데 발행자 위주의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,
- 특히, 해외 주요시장과 비교한 신용평가 시장규모, 기관투자자의 다양성과 신용평가 역량 등 측면의 차이를 감안할 때,
-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추진시 신용평가 품질개선 효과보다 부작용 및 시장혼란 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.

□ **[정책 제언]** 시장규율 강화와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**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**가 있으며,

- 추후 시장진입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**인가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**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.

* (예시) 일정기간 평가이력 축적 및 시장평가 후 신규인가, 인가단위 모듈화(단위 인가 허용), 정식인가 이전 제3자 의뢰 평가 허용 등

※ 한편,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**채권평가업***에 대해서도 논의

* **집합투자재산**에 속하는 채권 등 **자산의 가격을 평가**하고 이를 집합투자업자 등에 제공하는 업으로, 자본시장법(§263)에 따른 **등록제로 운영 중**(’00.6월~)

※ 최초 3사가 등록하였으며 ’11.9월 1社, ’21.7월 1社가 추가등록하여 현재 5社 등록

- **(경쟁도 분석)** HHI로 볼 때 高집중시장에 해당*하나 집중도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분석(HHI: ‘15년 3,032 → ’20년 2,848)

* 단, 평판자본 등의 중요성 등으로 美·EU 등 해외에서도 4개 내외 회사가 시장 주도

- **(평가)**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진입·퇴출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할 것으로 평가

- 펀드 투자자 보호 등에 중요한 인프라임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 진입수요 발생시 시장환경, 산업구도, 평가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

□ 경쟁도평가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.

- 기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의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지속 보완하고,
- 금번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.

□ 향후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인가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가방식을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.

* (예) 현재 인가받은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평가역량을 검증한 후 추가 인가여부 판단(평가이력 축적 후 인가, 인가단위 모듈화 등 시범적용)

<주요 제도개선 검토과제>

① 無의뢰 평가제도 도입

- 발행사 또는 제3자 등의 요청 없이도 금융투자상품 및 발행사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, 평가결과를 구독회원(투자자) 등에게 제공(subscriber-pay)
- ※ 美, EU 모두 허용중이며, 美는 무의뢰평가 활성화를 추진중(SEC Rule 17g-5)

② 이해상충방지 강화

- 신용평가사 또는 계열사의 영업이나 마케팅 요소가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 강화(인가요건 반영 등)
- ※ 美 SEC는 마케팅 요인이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줄 경우 등록취소 가능

③ 신용평가사에 대한 관리·감독 체계 개선

- 신용평가사에 대한 동태적·상시적 감시 체제 강화(인가유지 요건 등 감독 강화)

< 별첨 : 신용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연구(요약) >

< 금융 용어 설명 >

- (ROA, Return To Asset) 부채를 포함한 총 자산 대비 순수익
- (ROE, Return To Equity) 자기자본 대비 순수익
- (ABCP, AB전단채)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(Asset-Backed) 기업어음(CP), 전자단기사채(만기 1년 미만)를 발행하고, 기초 자산 운용 수익금 등으로 CP, 사채의 원리금 등을 지급

① 일반현황

구 분	한국기업평가	한국신용평가	나이스신용평가	서울신용평가*
설립일 (평가업무개시일)	'83.12.29 ('87.11)	'98.8.18 ('85.9)	'07.11.1 ('87.11)	'16.1.5 ('16.1)
상장여부 (상장일)	코스닥 ('02.2.7)	비상장	비상장	비상장
최대주주 (지분율, '20.12월 기준)	Fitch Ratings (73.6%)	Moody's Singapore (100%)	NICE홀딩스 (100%)	SCI평가정보 (66.7%)
주요업무 (평가대상)	신용평가 (모두)	신용평가 (모두)	신용평가 (모두)	신용평가 (CP, ABS, 전자단기사채 한정)
직원수 (임원수)	164명 (7명)	126명 (5명)	157명 (12명)	27명 (1명)
자회사 (지분율)	이크레더블 (67.8%) 코리아크레딧 뷰로(12.4%)	키스채권평가 (52.5%)	나이스피앤아이 (76.8%)	-
자 본 금 (발행주식총수)	245억원 (454만주)	50억원 (100만주)	50억원 (100만주)	100억원 (200만주)
업무제휴기관 (제휴일자)	Fitch ('99.1)	Moody's ('98.8)	R&I('00.4) Dagong Rating('07.5)	JCR ('00.8)
ECAI지정여부 (지정일)	○ ('07.7.12)	○ ('07.7.12)	○ ('07.7.12)	×

*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가부문을 분할하여 '서울신용평가'를 설립('16.1.5.)

② 주요 경영지표(단위 : 억원)

구 분	한국기업평가	한국신용평가	나이스신용평가	서울신용평가
자 산	1,073.1	424.5	453.3	88.7
부 채	261.4	116.0	154.2	3.6
매출액	530.3	425.4	436	36.3
당기순이익	174.4	142.5	103.1	5.4

1. 신용평가사 진입규제 연혁

- '01년 신용평가업이 신용정보법에 허가업으로 규정된 이후 '13년 신용평가 관련 규정이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면서 인가제로 변경

<신용평가 관련 진입규제 연혁>

구 분	근거 법령·규정	주무 부처·기관
('85.9월) 신용평가제도 도입	기업어음(CP)발행 적격업체 선정기준(협회 규칙)	전국투자금융협회
('86.3월) 회사채 신용평가제도 도입	일반사채 및 전환사채발행 적격기준(협회 규칙)	사채발행인수실무협의회 (증권사/종금사로 구성)
('94.7월) 무보증사채 신용평가 전문기관 지정제 도입	무보증사채 신용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(규정)	증권관리위원회, 증권감독원
('01.3월) 신용평가업 허가제	신용정보법	금감위, 금감원
('13.5월) 신용평가업 인가제	자본시장법	금융위, 금감원

2. 신용평가사 인가현황

- '94년 3사(한기평, 한신평, 나신평)가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,
- '01년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평가업 허가를 별도로 취득하였으며, '13년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용평가업 인가 취득*

* 자본시장법 부칙('13.5.28.) §14① :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신평사는 자본시장법 §335-3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

- 서신평은 '00년 자산유동화증권(ABS)과 기업어음(CP)에 한하여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, '01년 동일 업무에 대해 신용평가업 허가 취득
- '16.8월 기존 평가범위(ABS, CP) 외 전자단기사채 및 자산담보부채권(ABB)에 대해서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변경 인가 취득

3. 주요 제도개선 경과

□ ('12.3월) 「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」 발표

○ 발행사-신평사간 이해상충 방지*, 공시규제 강화** 등 제도개선

* 부수업무(컨설팅 등)를 제공한 대상기업에 대한 평가 금지, 서면 계약없이 사전에 평가등급을 알려주는 행위 금지 등

** 평가방법론 공시 의무화, 등급산정에 사용된 관련자료 리스트 공개 등

□ ('16.9월) 「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」 발표

<주요 제도개선 사항>

항목	세부 내용
1. 신용평가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	
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강화 등	- 신평사의 주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(최대 '영업정지' → 최대 '인가취소') ☞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'17.12월 시행)
신평사 임직원의 평가참여 제한	- 평가대상 발행사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을 보유한 임직원은 그 발행사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평가참여 금지 ☞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('17.12월 시행)
2. 신용평가사의 독립성 제고	
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	- 신평사가 발행기업 의뢰 없이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신용평가하는 제도도입 ☞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('17.12월 시행)
신평사 선정신청제	- 회사채 발행기업이 희망시 금감원이 선정·통보 하는 신평사로부터 평가를 받는 대신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 ☞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('17.12월 시행)
3. 신평사 시장규율 및 감독 강화	
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	- 신평사의 자정기능 활성화 를 위하여 내부통제 정책,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 제출·공시 의무부과 ☞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('17.12월 시행)
신평사 역량평가 실시	- '17.5월부터 연 1회 금투협 중심 평가 실시 중
신용평가 비교공시 확대	- 신평사별 평가결과 및 능력에 관한 비교공시 항목* 을 확대 하고, 중요정보** 공시 확대 * 평균 누적부도율, 부도기업 등급평정 추이, 등급변동 상위 기업 명단 및 평가추이, 연도별 등급 상하향 업체수 및 비율 ** 평가방법론 개정시 사전공시(1개월전), 신용등급 변동현황 공시 강화(1년→3년) 등

1. 미국

- (규제체계) SEC가 일정 요건을 갖춘 신용평가사를 국가공인신용평가기관(NRSRO)에 등록('20년 기준 9개사 등록)하고 영업행위를 감독
 - * '75년 지정제 실시 이후 '06년 신용평가기관 개혁법(CRARA) 시행으로 등록제로 전환
-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기간(3년) 업력을 쌓고, 최소 10개 이상의 적격기관투자자(QIB)로부터 신용등급 적정성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함
 - * 은행, 금융투자업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의미하며, 우리나라 '적격투자기관'과 유사(증발공 규정)
- 신규 사업자는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* 등록 신청 가능
 - * ①은행, 금융지주 및 증권사 등 금융회사, ②보험사, ③회사채, ④자산유동화증권, ⑤국채·지방정부채·외국국채 등 5개 권역으로 분류
- (시장현황) S&P와 Moody's 社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, 시장집중도 지수인 HHI^{3,712}, CR3^{93~95}는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유사('20년 기준)

2. 유럽연합(EU)

- (규제체계)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체계를 신설('09년, CRA법)하여 등록제를 도입(유럽증권감독청(ESMA)이 감독)
 - 신규 사업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부분* 등록 신청 가능
 - * ①금융회사, ②보험사, ③회사채, ④구조화증권, ⑤정부·공공기관 등 5개 권역으로 분류
- (시장현황) 미국과 마찬가지로 S&P와 Moody's 社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, 시장집중도 지수(HHI^{3,049}, CR3^{91.1})도 높은 상황

3. 일본

- (규제체계) 등록제 운영중('20년말 기준 5개사 등록)이며, 미등록 신평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은 원칙적으로 활용을 제한*
 - * 해당 신용등급이 미등록 신평평가사의 등급임을 설명하고 신용등급의 중요성과 한계를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 가능 (금융상품및거래법 제38조제(iii)호)
- (시장현황) 등록된 평가사는 5개社('20년 기준)로, 엔화채권의 경우 2社(JCR, R&I)가, 외화채권의 경우 글로벌 3社*가 시장 과점
 - * S&P, Moody's, Fitch

연번	성명/현직	발언요지
1	여은정 중앙대 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용평가사(공급자)와 발행사(수요자)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할 필요 - 장기적으로는 issuer-pay 모형에 따른 발행자 우위의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플랫폼페이 모형* 도입도 검토가능 * 평가정보를 구독자(subscriber)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에서 평가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
2	이기영 KDI 연구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진입보다는 등급인플레,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평가기준 적용 차이 등 평가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할 필요 - 과거 연구수행 경험상 신용평가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후하게, 중견·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
3	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진입이 평가품질 개선으로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, 건전성 등 영업행위 규제 강화가 품질개선에 더 중요 - 평가 품질 개선을 위해서 무의뢰 평가제도 도입 또는 제3자 의뢰평가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
4	전상경 한양대 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진입은 신용평가시장에서의 발행자 우위 구조개선과 신용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 - 무의뢰 평가제도와 제3자 의뢰평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가업무 관련 세부규정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
5	조성진 서울대 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기간 3사 균분 체제는 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어, 장기적으로는 신규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- 다만, 신규 진입으로 인한 평가의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함 - 무의뢰 평가나 제3자의뢰평가 활성화 방안에 찬성
6	조혜진 인천대 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신용평가업 제도개선의 목표가 되어야하며, 특히 신용평가 영업행위와 관련한 규제개선이 핵심이라고 생각
7	하정림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의뢰 평가제도 도입에 찬성하며, 장기적으로는 회계사 시장에 도입된 지정감사제를 참고할 필요 - 신규진입자의 평가를 선택할지는 수요자의 판단 문제로 장기적으로 평가사 신규진입은 허용되어도 좋다고 생각
8	이효경 충남대 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해상충방지 등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중요. 다만,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업계 경영 환경을 주시하면서 제도개선을 진행할 필요 - 장기적 관점에서는 신규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